

오피니언

光日春秋



정 목 일

2008년의 우리 화두는 '촛불'로 집약된다. 한국에는 지금 촛불뿐인 듯하다. 촛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형국이다. 촛불 때문에 한 치의 앞을 내다볼 수도 없다.

'당신들도 조용하게 되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침착하게 빛의 일을 하고 있는 경쾌한 불꽃 앞에서 가만히 숨쉬어 보라'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시인인 가스통 바슐라르(1884~1962)가 그의 저서 '촛불의 미학'에서 한 말이다. 촛불이 방안에 켜지는 순간, 촛불이 놓인 자리는 우주와 사색의 중심점이 된다. 촛불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긴다. 바라보도록 강요하고 있다. 촛불을 함께 응시함으로써 우리는 이 순간 한 공간에 있음을 인식한다. "창조에 있어서 '삶'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모든 형태, 모든 존재를 통하여 오직 하나의 동일한 정신, 즉 유일한 불꽃이다." 바슐라르는 촛불을 보면서 동상과 철학과 존재의 미학을 탐구했다.

촛불은 아픈 사람을 간호한다든가, 누가 죽었을 때 추모하기 위해 밝혔다. 제의에서 촛불은 사용된다. 초를 태워 빛을 만드는 것을 보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며 집중력과 정신의 심지에서

촛불이 되어 타오르는 걸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촛불은 어느새 제의적이거나 미학적인 의미를 벗어나 항의, 저항, 농성의 시위행위로 바뀌었다. 큰 사건 때마다 촛불을 들고 모이게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촛불문화나 촛불정치라는 말이 등장하고, 이제 이러한 집단행동이 정당화되고 미화되고 있다. 무슨 일이나 촛불만 들고나가면 정당하고 의미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 듯한 현실이 놀랍다. 이 촛불행사는 '촛불시위' 또는

촛불의 현상학

촛불집회'라고 하다가 이제는 '촛불문화(제)', '촛불정치'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바람에 꺼질듯 가냘프고 어린 의미의 촛불이 한국에서 시위나 저항, 공격 등의 거친 의미로 바뀌게 된 것은 한국인들의 강한 집단적 성향 때문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실제 촛불을 들고 나온 사람들은 정부의 쇄고기 협상이 잘못됐다며 제 협상을 촉구했다.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촛불시위의 속도로는 미국과 재협상의 길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그

제도 조율도 없다.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명사와 입장을 밝히던 사회단체와 지식인들은 침묵하고 있다. 타오르는 촛불의 균중심리에 자신이 탈까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사이, 우리 사회는 전진을 멈추고 방향과 혼동의 회오리 속에 빠져있다.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내놓기 위해 정치권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한다. 지금은 각계각층이 앞서서 지혜의 촛불을 켜야 할 때다. 촛불의 균중심리에 눈치만 보지 말고 중의를 모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촛불집회는 소통의식의 일면이 있다. 인터넷상에서만 소통하던 행위에서 오는 체감적인 변의 부족함을 촛불집회를 통해 보충하고 확인하는 심리가 있어 보인다. 우리는 지금 촛불의 방향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켜 것인가? 끌 것인가? 촛불이 가져다주는 민생과 경제의 표시,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서 관찰과 반성 속에서 새로운 출발점을 찾는 논의가 절실하며, 상생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Kisti의 과학향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 기 원

서울 교외의 한 흥가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빈방 안에는 두 사람의 시체와 벽에 뿌려진 다량의 혈흔이 있었다. 문제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모른다는 점이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서로 가해자이거나, 제 3자의 범행일 수도 있다. 이런 사건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범인을 밝혀낼까? 중요한 단서인 혈흔의 분석을 통해 함께 추적해보자!

만약 사람이 날카로운 도구로 찔려거나 멧목한 무언가에 얻어맞으면 피를 흘리게 된다. 이 때 부상의 유형과 위치, 정도, 개제한 힘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혈흔이 만들어진다. 피방울이 형성되는 과정, 공기 중을 이동하는 속도, 여러 형태의 표면에 부딪힐 때 피방울이 일으키는 반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수사는 한결 쉬워진다.

혈흔형태의 분석 결과는 사건 현장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술 또는

말 없는 목격자, 혈흔(血痕)


이 실제의 사건현장에서 관찰된다. 손, 머리카락 등에 묻은 혈흔이 다른 물건에 묻은 경우의 전달된 혈흔, 코 등에서 호흡에 의해 분출된 호기 혈흔, 파리 등이 옮겨서 마치 비산된 작은 혈흔처럼 보이는 파리 열매 등 다양한 혈흔의 모양이 존재하고 이들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혈흔의 형태와는 달리 혈흔의 양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는 다량의 혈흔만 남기고 실종된 상태였다. 용의자는 그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그를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유전자분석 결과 혈흔은 분명히 피해자의 것이 맞았다. 하지만 그가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흘린 혈흔의 양이 정말 치사량에 이를 수 있는 양인지를 추정해야 했다. 정밀하게 혈흔의 양을 측정할 결과 흘린 피가 치사량에 가까운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 사건은 결국 사법사상 처음으로 간접적인 증명으로 시신이 없는 살인죄가 인정되었다.

외국은 1983년 11월에 매도널 박사에게 의해 국제혈흔형태분석전문가협회(IABPA)가 결성되었으며 한국도 지난 2008년 6월 5일 한국혈흔형태분석학회가 창립되어 출범하였다. 살인 사건 등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현장에 흔적이 있는 한, 완전범죄란 없다. 사건 당시에 피해자 또는 범인이 흘린 혈흔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 현장에서 혈흔의 흐름과 왜곡

기 고



한 병 선

‘무자격 교장 공모제 유감’에 대한 반론

광주일보 6월25일자 19면 '무자격 교장 공모제 유감'에 대한 이동범 광주여대 객원교수의 기고문을 읽었다. 기고의 요지는 "무조건적으로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교장의 자격 요건 및 연수체계 강화, 교장 재임용의 엄격한 적용 등 기준에 있는 제도를 통해 학교장의 개방적 리더십을 유도하고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공모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 공모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한 부분 맞는 말이지만 하다. 지적한 대로 공모과정에서 잡음들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기고자는 공모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개방형과 내부형의 문제만으로 몰아간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초빙교장의 숫자가 더 많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주장은 적절치 않다.

뒤집어 말하면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컸다는 의미이다.

교장 자격증이 필요 없는 개방형 공모의 경우도 현직 교장이, 심지어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응모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학교운영위원회와 결탁하여 공모제를 정년연장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던가. 초빙형의 경우

교장의 전문성이란 무엇인가. 교장이 되기까지 그 지난한 과정 속에서 터득한 지난한 학습효과에 따른 무사안일, 권위주의, 변화에 대한 둔감, 냉소주의가 교장의 전문성인가?

현행 승진제에 기반한 지금까지의 문제는 교장의 자격조건이 약해서, 연수강도가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기고자의 주장대로 자격조건 강화, 연수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일정 부분 공모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모제의 취지대로 투명하게 제대로 제도가 정착된다면 교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모제는 폐쇄적, 보신(保身)적, 비교육적 체질과 분위기를 바꿔 좀 더 개방적, 혁신적, 봉사적 리더십을 확보하자는 취지가 아니던가.

〈교육평론가〉

음식업중앙회 쇠고기 원산지표시 확대 반대는 이기주의

지금 온 국민은 촛불시위를 통해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를 주장하고 있다. 식탁이 불안하면 어떻게 아이를 키우며 우리의 건강을 지키겠는가. 그래서 정부는 쇠고기 수입에 있어서 원산지 표시제 확대와 강력한 지도 감독을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음식업중앙회가 쇠고기 원산지표시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고 하니 실망스럽고 충격적이다. 아니 어떻게 자기네 배 불러왔다고 노골적으로 반발을 하는가. 이는 식당을 찾는 손님에게 미국산이든 호주산이든 외국 소고기를 올려놓고 한우라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주장과 뭐가 다른가.

원산지표시는 그동안 누차 강조해왔듯이 음식점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음식점들을 대표한다는 음식업중앙회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고객보다는 업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기주의의 전횡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음식업중앙회는 표시 대상 품목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한다. 하지만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갈비가 됐든 탕 종류가 됐든 소비자들은 이것이 한우인지 수입산인지, 수입산이면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분명하게 알고 먹을 권리가 있다.

농수물의 경우 재래시장 한귀툰에서 광주리로 나를 한충 놓고 파는 할머니도 원산지표시를 한다. 그런데도 버젓이 신고를 하고 영업하는 음식점들이 이를 못하겠다 고 하면 또 또한 촛불시위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유병숙·광주시 광산구 박홍동

시 설

‘허점투성이’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지난 1일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 가운데 단속이 시작했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제도 자체에 허술한 점이 많은 데다 원산지를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인력 등이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이 의문이다. 이런 '허점투성이' 원산지 표시제도는 오히려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가장 큰 문제는 한우와 수입산을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유전자 검사로는 한우와 비(非)한우 구별만 가능하다고 한다. 미국산이 캐나다산이나 호주산으로 둔갑해도 이를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3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유전자 검사는 최소 20일 이상이 소요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장비와 인력 부족도 걸림돌이다. 유전자 검사 3단계에서 한우 판정을 하는데 필요한 '염기서열 분석'에 사용되는 '베라 코드'란 장비는 전국에 2대밖에

있다. 또 1, 2단계 유전자 검사를 하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의 시료검사 건수는 겨우 20건에 불과하다. 두 기관이 연중 하루도 쉬지 않고 총 1만4천600건의 시료를 채취·판별한다고 하더라도 광주지역의 원산지표시 단속 대상 업소 2만여 곳을 관리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신고포상제도 유명무실하기는 마찬가지다. 단속 전문기관도 한우와 비 한우를 확실 판별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일반 소비자가 원산지를 가려내기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음식점도 표시 방법이나 대상조차 제대로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제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서둘러 개선·보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원산지를 속여 파는 업소는 곧바로 엄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체계적이고 단호한 단속의지를 보여야 한다.

균형발전정책 구체적 청사진 제시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지방이 경쟁력을 가져야 국가 경쟁력을 갖는다며 지방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을 갖고 "지금 세계는 국가간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와 도시, 지역과 지역 간의 경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루 전에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 집중되면 인건비와 땅값 상승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수도권 경쟁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지방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도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의 경쟁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잇단 언급은 이례적이다. '지방은 없다'는 말에서 드러나듯 새 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노무현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균형발전 정책에 제동을 걸며 지방

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새 정부의 지방정책은 출범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다. '5+2 광역경제권'과 '남해안 신벨트' 등의 구상을 내놓았지만 구체적 계획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이 대통령이 지방의 경쟁력을 거듭 언급한 것은 환영할만 하다.

문제는 후속조치다. 규제완화 조치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방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실체가 없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라고 하면 곤란하다. 모든 조건에서 열악한 지방이 수도권과 똑같이 경쟁하라는 것은 '지방 죽이기'나 다름없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은 인건비와 땅값 상승만이 아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환경 파괴,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은 헤아릴 수 없다. 정부는 균형발전의 구체적 청사진을 서둘러 제시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無 等 鼓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보양식은 채식이 주로 했던 우리 민족이 칼로리 소모가 많고 기가 허해지는 여름을 넘기기 위한 지혜가 담겨 있다.

보양식은 지역에 따라, 기호에 따라 종류도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일왕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양식은 민물장어다. 검은색 음식이 스테미너에 좋다는 일본인들의 믿음도 한 몫하면서 여름철이면 민물장어 식당 앞이 손님들로 넘친다.

조선시대 궁중에서의 보양식 재료는 우유였다. 지금이야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으나 당시에는 별도의 관리기관에서 암소를 키울 정도로 우유는 귀한 식재료였다. 쌀을 불린 후 우유를 넣어 끓인 타락(脫酪)국이 가장 많이 왕실의 식탁에 올랐다. 타락은 말린 우유라는 뜻을 가진 '토라크'라는 몽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락국은 부드러운 참쌀에서 은은히 느껴지는 단맛과 우유의 고소한 맛이 잘 어울려 원기를 돕고

비위를 조화롭게 하는 알칼리 음식으로 만화 '식객'에 소개되기도 했다. 전남 서해안 지역에서는 민어를 보양식의 으뜸으로 친다. 무더운 여름철에 잡히는 민어로 찜이나 국을 만들어 복달임을 했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보양식 대표주자는 역시 삼계탕과 보신탕이다. 물장어다. 검은색 음식이 스테미너에 좋다는 일본인들의 믿음도 한 몫하면서 여름철이면 민물장어 식당 앞이 손님들로 넘친다.

완도군이 초복인오는 19일을 '전복 데이'로 정하고 삼계탕에 완도산 전복을 넣은 전복 삼계탕을 보양음식으로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전국 전복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완도군이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어민들을 돕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판촉활동에 나선 것이다. 보양식으로 건강도 챙기고 가뭄이나 합된 농어민들에게 평소 실어주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

/김재일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전복데이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가11업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6	어촌재무부 2200-628	다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회 1부 2200-618	체육팀 2200-627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400원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